

형사정책

문 1. 형사정책학의 연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참여적 관찰이란 연구자가 직접 일정한 범죄집단에 들어가 범죄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 등을 수집하거나 그들의 생활을 관찰하는 방법을 말한다.
- ② 추행조사는 일정 수의 범죄자 또는 비범죄자를 일정 기간 계속적으로 추적하면서 사회적 조건의 변화상태를 분석하고, 그 변화상태와 범죄자 또는 범죄와의 연결관계를 살펴보는 방법이다.
- ③ 실험적 연구는 일반적으로 새로 도입한 형사제도의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활용된다.
- ④ 사례조사는 연구의 대상이 되는 실험집단과 그에 대조되는 일정수의 정상집단, 즉 통제집단을 선정한 후 양 집단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규명한다.
- ⑤ 범죄통계표의 분석은 범죄현상의 경향 파악에 활용된다.

문 2. 다음은 고전주의학파와 실증주의학파에 관한 내용이다. 같은 학파에 해당하는 내용만으로 옳게 묶인 것은?

- ㄱ. 인간을 의사자유를 가진 이성적 존재로 보았다.
 ㄴ. 계몽주의, 공리주의에 사상적 기초를 두었다.
 ㄷ. 범죄와 형벌의 균형을 중요시 하였다.
 ㄹ. 형벌을 보안처분으로 대체할 것을 주장하였다.
 ㅁ. 인간행위보다 인간 자체에 초점을 두었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ㄹ, ㅁ
- ④ ㄴ, ㄷ, ㅁ
- ⑤ ㄷ, ㄹ, ㅁ

문 3. 생물학적 범죄원인론에 관한 설명이 옳은 것만으로 묶인 것은?

- ㄱ. 고링(C. Goring)은 롬브로조의 범죄인 분류를 정면으로 반박하였다.
 ㄴ. 셸던(W. Sheldon)은 비행소년의 평균체형은 중배엽형, 즉 근육이나 골격의 발달상태의 수치가 높다고 하였다.
 ㄷ. 랑에(J. Lange)는 체형과 기질이 일치하는 쌍둥이가 비만형의 체형을 가지면 대체로 사기범죄를 저지를 경향이 높다고 하였다.
 ㄹ. 제이콥스(P. Jakobs)는 남성성을 나타내는 Y 염색체가 많은 자는 외배엽형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신체긴장형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문 4. 피해자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해자가 되기 쉬운 사람들의 심리상태나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사회구조를 연구한다.
- ② 피해자의 진술권보장, 배상명령제도 및 증인보호 등은 피해자학의 중요한 관심영역이다.
- ③ 범죄피해원인론 중 생활양식이론이 사회계층별 폭력범죄의 위험성을 밝히려고 했다면, 일상활동이론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범죄율의 변화를 설명하려고 하였다.
- ④ 헨티히(H. von Hentig)와 멘델존(B. Mendelsohn)은 피해자학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 ⑤ 피해자학에서의 피해자는 형식적 의미의 범죄개념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만을 의미한다는 데에 견해가 일치한다.

문 5. 많은 소년들이 범죄나 비행을 유발하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 이유는 비행에 대한 절연체가 있기 때문이며, 스스로를 올바른 소년으로 인식할 경우 비행에의 유혹이나 압력을 단절시킬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주장하는 이론은?

- ① 자아관념이론(self-concept theory)
- ② 표류이론(drift theory)
- ③ 비행적 하위문화이론(theory of delinquent subculture)
- ④ 문화갈등이론(culture conflict theory)
- ⑤ 사회해체이론(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문 6. 통제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통제이론은 사람들이 왜 범죄행위로 나아가지 않고 합법적인 행동을 하는가라는 물음에 중점을 두고 있다.
- ② 라이스(A. Reiss)는 개인의 통제력과 범죄의 관계를 주목하였다.
- ③ 통제이론의 공통된 견해는 생물학적이거나 심리학적 혹은 사회적인 특정 요인이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다.
- ④ 나이(F. Nye)는 청소년들의 비행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비공식적인 간접통제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 ⑤ 허쉬(T. Hirschi)는 범죄발생의 통제요인으로 개인이 학교, 가족, 이웃 등 일상적인 사회와 맺고 있는 유대 또는 연대를 주장하였다.

문 7. 甲은 보석을 절도하면서 피해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모은 재산이기 때문에 보복으로 한 것이라고 자기의 행위를 합리화하였다. 사이크스(G. M. Sykes)와 맛차(D. Matza)의 중화기술의 유형 중 어디에 속하는가?

- ① 책임의 부정
- ② 가해의 부정
- ③ 피해자의 부정
- ④ 비난자에 대한 비난
- ⑤ 보다 높은 충성심에의 호소

문 16.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알콜중독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한 자라도 재범위험성이 없는 한 치료감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검사는 공소제기한 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결과 치료감호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검사의 청구 없이 치료감호를 선고할 수 있다.
- ④ 치료감호사건의 판결은 반드시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⑤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해야 하며,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기에 산입한다.

문 17. 수형자의 처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마약류사범 수형자로 하여금 소변을 받아 제출하도록 한 것은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 수사에 필요한 처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검사대상자들의 협력이 필수적이어서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헌법상의 영장주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② 다른 수용자와 싸움의 우려가 있고, 성격·습관 등이 공동생활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인정되어 독거수용되었다고 하더라도 TV 시청을 제한받게 되어 혼거실 수용자 등 다른 수용자들과 차별적 처우가 이루어지는 결과가 되었다면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 ③ 금지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집필의 목적과 내용 등을 묻지 않고 또 대상자에 대한 교화 또는 처우상 필요한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일체의 집필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제한이라는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 ④ 금지기간 중의 접견·서신수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장으로 하여금 이를 허가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되므로 금지 수형자에 대한 접견·서신수발의 제한은 필요최소한의 제한에 해당한다.
- ⑤ 금지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한 절대적인 운동의 금지는 징벌의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문 18. 「소년법」이 규정하고 있는 소년 보호사건의 대상에 속하지 않는 소년은?

- ① 죄를 범한 19세의 자
-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고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6세의 자
- ③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3세의 자
- ④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성벽이 있고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8세의 자
- ⑤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의 자

문 19. 시설 내의 엄격한 처우를 완화하기 위한 개방처우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 외부통근제
- ② 독거수용제
- ③ 부부만남의 집
- ④ 주말구금제
- ⑤ 개방교도소

문 20. 다음 중 「소년법」상 10세 이상 12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 할 수 없는 보호처분으로 모두 묶인 것은?

ㄱ. 보호자에게 감호 위탁	ㄴ. 수강명령
ㄷ. 사회봉사명령	ㄹ. 단기 보호관찰
ㅁ. 장기 보호관찰	ㅂ. 아동복지시설에 감호 위탁
ㅅ. 병원, 요양소에 위탁	ㅇ.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ㅈ. 단기 소년원 송치	ㅅ. 장기 소년원 송치

- ① ㄴ, ㄷ, ㅁ
- ② ㄴ, ㄷ, ㅈ
- ③ ㄴ, ㅁ, ㅅ
- ④ ㄷ, ㅁ, ㅈ
- ⑤ ㅇ, ㅅ, ㅈ

문 21. 고등학교를 중퇴한 甲(17세)은 슈퍼마켓에서 종업원 乙과 다투던 중 乙을 살해함으로써 살인혐의로 기소되어 유죄로 인정되었다. 甲에 대한 처벌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 ② 징역·금고형의 집행 중에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그 형을 집행할 수 있다.
- ③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부정기형을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 ④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10년이 경과하여야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 ⑤ 甲의 죄가 법정형 2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경우 징역 3년의 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문 22.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해자는 공판절차에서 증인으로 신문을 받는 경우 신뢰 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피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 ③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④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범죄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⑤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권을 행사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은 진술할 수 없다.

문 23. 소년 형사사건절차와 소년 보호사건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년 형사사건의 경우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 ② 소년 보호사건의 경우 진술거부권의 고지에 관한 규정이 있다.
- ③ 소년 형사사건의 경우 무죄재판을 받으면 「형사보상법」이 적용될 수 있다.
- ④ 소년 보호사건의 경우 심리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⑤ 소년 보호사건의 경우 소년부 판사는 검증,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있다.

문 24. 「소년법」상 소년사건의 처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에게 피해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 ②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소년에 대한 소년원 송치는 최장 3년까지 가능하다.
- ④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도 원칙적으로 노역장유치 선고가 가능하다.
- ⑤ 소년부는 송치 받은 사건을 조사한 결과 사건의 본인이 18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지면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할 수 있다.

문 2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면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임하여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가 취할 수 있는 응급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폭력행위의 제지
- ② 범죄수사
- ③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로의 피해자의 인도
- ④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 ⑤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이내의 접근금지

국 제 법

문 1. A국에 인접한 공해에서 B국 국적의 30만톤급 대형유조선이 좌초되었고, 동 선박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대량의 원유가 해류를 따라 A국 연안으로 급박하게 밀려들고 있다. 이에 A국은 자국 연안 및 영해의 오염 확산을 막고자 B국과의 협의 없이 동 선박을 폭파하였다. 이 사안에서 A국이 B국의 국가책임 추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원용할 수 있는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 초안' 상의 위법성 조각사유로 적합한 것은?

- ① 동의(consent)
- ② 자위권(self-defence)
- ③ 대항조치(countermeasures)
- ④ 조난(distress)
- ⑤ 긴급피난(necessity)

문 2. 국가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률상 승인(recognition *de jure*)과 사실상 승인(recognition *de facto*)은 모두 법적 효과를 갖는다.
- ② 신생국의 국제기구 가입은 그 국제기구 회원국들의 집단적 승인으로 간주된다.
- ③ 국가승인은 국가의 재량적 행위로 신생국을 승인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 ④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불법적 무력행사로 수립된 국가에 대한 불승인의무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증대되고 있다.
- ⑤ 국가의 성립요소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승인한 사례가 있다.

문 3. A국 국민인 갑이 B국 영해를 항해하고 있는 C국 여객선 내에서 D국 국적의 승객들에 대해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를 범한 경우 D국이 갑에 대해 형사재판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 ① 수동적 속인주의 또는 보편주의(세계주의)
- ② 객관적 속지주의 또는 수동적 속인주의
- ③ 주관적 속지주의 또는 보편주의(세계주의)
- ④ 주관적 속지주의 또는 보호주의
- ⑤ 보편주의(세계주의) 또는 능동적 속인주의

문 4. 국내문제불간섭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UN헌장 제2조 제7항은 본질적으로(essentially) 국내문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간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② 국제연맹규약 제15조 제8항은 전적으로(solely) 국내문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간섭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 ③ UN헌장은 국내문제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판단권자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 ④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는 국내문제인지 아니면 국제문제인지에 대한 구분은 상대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 ⑤ UN은 UN헌장상의 국내문제의 범위를 가능한 한 넓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

문 5. 법의 일반원칙의 법원성(法源性)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볼 때, 법의 일반원칙의 기능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 ① 국제법의 흠결로 인한 재판불능(*non liquet*)의 방지
- ② 상충되는 내용을 가지는 국제관습법의 배제
- ③ 재판관의 독단적인 판단 방지
- ④ 국가주권에 기초한 유리한 추정의 남용 방지
- ⑤ 국제법의 미확정분야에서의 국제법의 충실화의 촉진

문 6.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는 국제적 차원에서 국내법에 대한 국제법 우위의 원칙을 적용하였다.
- ②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에 위반하는 조례는 무효로 될 수 있다.
- ③ 국내법에 저촉되는 조약이라도 국제적으로는 유효할 수 있다.
- ④ 미국의 경우, 조약을 국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내법으로 변형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⑤ 켈젠(H. Kelsen)은 근본규범설에 입각하여 국제법우위일원론을 주장하였다.

문 7. 국가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 ㄱ. 국제의무의 위반은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 ㄴ. 국가책임은 다른 국가에 대한 간접침해(*indirect injury*)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 ㄷ. 사인(私人)의 행위라 할지라도 국가가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국가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 ㄹ. 외국인에 대한 재판절차가 불공정하더라도 사법권 독립의 원칙에 의하여 국가는 국제법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ㅁ. 외교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공무원의 국제법 위반행위는 국가에 책임이 귀속되지 않는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ㅁ
- ④ ㄴ, ㄷ, ㄹ
- ⑤ ㄴ, ㄹ, ㅁ

문 8.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유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약의 일부 규정의 법적 효과를 배제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것이다.
- ② 일방 체약국이 행한 유보는 원칙적으로 타방 체약국 모두에 의한 수락을 필요로 한다.
- ③ 조약 적용상의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 ④ 허용가능성과 관련하여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의 양립가능성이 주요한 판단 기준이다.
- ⑤ 조약관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문제점이 있다.

문 9. 조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구두조약은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 ② 조약은 가입허용 여부에 따라 보편조약, 일반조약 그리고 특별조약으로 분류할 수 있다.
- ③ 조약에 대한 1차적 해석권한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있다는 것이 확립된 원칙이다.

- ④ UN 사무국에 등록되지 않은 조약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 ⑤ 신사협정(*gentlemen's agreement*)은 조약의 일종이다.

문 10.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의 종료 혹은 시행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다자조약은 그 당사국 수가 그 발효에 필요한 수 이하로 감소하는 사실을 이유로 종료한다.
- ② 양자조약의 일방 당사국에 의한 실질적 위반(*material breach*)은 그 조약의 종료 또는 시행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위한 사유로서 그 위반을 원용하는 권리를 타방 당사국에 부여한다.
- ③ 조약의 이행불능이 그 조약의 시행에 불가결한 대상의 영구적 소멸 또는 파괴로 인한 경우에 당사국은 그 조약을 종료시키거나 또는 탈퇴하기 위한 사유로서 그 이행불능을 원용할 수 있다.
- ④ 조약의 이행불능이 일시적인 경우에는 조약의 시행정지를 위한 사유로서만 원용될 수 있다.
- ⑤ 조약 당사국 간의 외교 또는 영사관계의 단절은 외교 또는 영사관계의 존재가 그 조약의 적용에 불가결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조약에 의하여 그 당사국 간에 확립된 법적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문 11. 범죄인인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과 틀린 것(×)을 맞게 표시한 것은?

- ㄱ. 범죄인인도는 국가관할권의 영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라는 점에 제도적 의의가 있다.
- ㄴ.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범인을 인도할 수 있다.
- ㄷ. 범죄인인도 전반을 규율하는 보편적인 다자조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 ㄹ. 한국은 「범죄인인도법」(1988년)을 제정하고, 호주와 최초로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였다.
- ㅁ. 인도요청된 범죄보다 경한 다른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이다.

- ① ㄱ(○), ㄴ(○), ㄷ(○), ㄹ(○), ㅁ(×)
- ② ㄱ(○), ㄴ(×), ㄷ(○), ㄹ(○), ㅁ(○)
- ③ ㄱ(×), ㄴ(○), ㄷ(○), ㄹ(○), ㅁ(×)
- ④ ㄱ(○), ㄴ(○),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문 12. 국제법상 외교적 보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국의 국제위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국민에 대해서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나 자국민 이외의 자에 대해서도 행해질 수 있다.
- ② 피해를 입은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국가 자신의 권리이므로 국가가 그 행사에 대한 재량권을 갖는다.
- ③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인터한델(*Interhandel*) 사건’에서 이중국적자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 행사와 관련하여 자국민과 진정한 관련(*genuine link*)이 있는 국가가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 ④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 요건으로 피해자의 국적계속의 원칙이 있다.
- ⑤ 국내적 구제수단이 없거나 공정한 구제를 받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국내적 구제완료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 13. 1982년 UN해양법협약상의 해협통항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공해와 외국의 영해를 연결하는 해협에는 통과통항이 적용된다.
- ② 통과통항은 항공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③ 국제항행용 해협 안에 항행상 및 수로상의 특성에서 유사한 편의성이 인정되는 공해통과항로가 있는 경우, 이 해협에서는 통과통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④ 연안국의 섬과 본토에 의하여 형성된 해협으로서, 섬의 해양쪽에 항행상 및 수로상의 특성에서 유사한 편의성이 인정되는 공해통과항로가 있는 해협에서는 통과통항이 적용된다.
- ⑤ 연안국은 안보상의 이유로 통과통항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문 14. 1982년 UN해양법협약은 연안국이 배타적경제수역에서 가지는 권리를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으로 구분하고 있다. 다음 중 연안국이 주권적 권리를 가지는 사항만으로 올바르게 짝지워진 것은?

ㄱ. 어업	ㄴ. 해양의 과학적 조사
ㄷ. 폐기물 투기의 규제	ㄹ. 인공섬의 설치
ㅁ. 석유의 채굴	ㅂ. 풍력발전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ㅁ
- ③ ㄱ, ㅁ, ㅂ
- ④ ㄴ, ㄷ, ㄹ
- ⑤ ㄴ, ㄹ, ㅂ

문 15. 1982년 UN해양법협약상 영해에서의 외국선박에 대한 연안국의 권한 행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영해를 통항 중인 외국선박 내에 있는 사람에 대한 민사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그 선박을 정지시킬 수 없다.
- ② 기국의 외교관이 현지당국에 지원을 요청하면 영해를 통항하고 있는 외국선박 내에서 통항 중에 발생한 범죄와 관련된 사람을 체포할 수 있다.
- ③ 영해에 정박한 외국선박에 대하여 민사소송절차의 목적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
- ④ 영해통항에 관한 연안국의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연안국의 법령준수 요구를 무시하는 외국 군함에게 영해에서 즉시 퇴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연안국 수역을 항행하기 위하여 선박 스스로 부담한 의무의 경우 그 선박에 대하여 민사소송절차의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문 16. UN 총회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가 있어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모은 것은?

ㄱ.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선출
ㄴ. 신회원국 가입 승인
ㄷ. 예산안 심의 및 승인
ㄹ. 사무총장 임명
ㅁ. 국제사법재판소에 권고적 의견 요청
ㅂ. 회원국 제명

- ① ㄱ, ㄴ, ㄹ
- ② ㄱ, ㄴ, ㅁ
- ③ ㄱ, ㄷ, ㅂ
- ④ ㄴ, ㄹ, ㅁ
- ⑤ ㄴ, ㄹ, ㅂ

문 17. UN헌장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 묶인 것은?

- ㄱ. 강제조치의 대상인 회원국의 권리와 특권의 행사에 대한 정지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에 의하여 회복될 수 있다.
- ㄴ. 총회는 회원국으로서의 분담금 지불의 불이행이 그 회원국이 제어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 회원국의 투표를 허용할 수 있다.
- ㄷ. 회원국이 체결한 조약을 사무국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UN의 어떠한 기관에 대해서도 그 조약을 원용할 수 없다.
- ㄹ. 안전보장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을 집행하기 위하여 권고하거나 취하여야 할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 ㅁ. 총회는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거나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권고하거나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 ① ㄱ, ㄷ
- ② ㄱ, ㅁ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ㄴ, ㅁ

문 18.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적 의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UN 사무총장은 UN의 행정에 관한 법률문제에 관하여 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UN 총회의 허가를 받은 세계보건기구(WHO)는 그 활동범위 안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관하여 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없지만 권고적 의견 절차에서 서면 또는 구두진술을 할 수 있다.
- ④ 권고적 의견이 요청된 경우에도 ICJ규정 제31조에 규정된 임시재판관(judge ad hoc)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
- ⑤ 권고적 의견은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국제기구와 국가들은 조약을 체결하여 권고적 의견에 구속력을 부여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문 19.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재판관할권 행사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짝지워진 것은?

- ㄱ. 국가와 국제기구 간의 분쟁도 이들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회부되는 경우 ICJ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 ㄴ. 특정의 분쟁에 대하여 ICJ가 관할권을 가지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ICJ가 스스로 결정한다.
- ㄷ. ICJ는 분쟁의 성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사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평과 선(ex aequo et bono)에 따라 재판할 수 있다.
- ㄹ.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규정에 의한 선택조항(optional clause)의 수락선언은 ICJ에 대하여는 효력을 갖지 못한다.
- ㅁ. ICJ는 사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각 당사자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잠정조치(provisional measures)를 제시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ㅁ
- ⑤ ㄷ, ㄹ

문 20.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소재판부(Chamber)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ICJ는 특정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소재판부를 언제든지 설치할 수 있는데, 실제로 '메인(Maine)만 사건'에서 이러한 소재판부가 설치되었다.
- ② 1993년 ICJ는 환경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재판관 7명으로 구성된 소재판부를 설치한 바 있다.
- ③ ICJ는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간이소송절차로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재판관 5명으로 구성된 소재판부를 매년 설치하여야 한다.
- ④ 소재판부는 당사국들의 동의를 얻어 헤이그 이외의 장소에서 개정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⑤ 소재판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전원재판부에 상소할 수 있다.

문 21.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절차에서 다음 국제통상에 관한 법적 문서들 상호간 효력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ㄱ.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반덤핑협정)
 ㄴ.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WTO설립협정)
 ㄷ.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994)
 ㄹ. 미국의 반덤핑법규

- ① ㄱ→ㄴ→ㄷ→ㄹ
- ② ㄱ→ㄴ→ㄹ→ㄷ
- ③ ㄱ→ㄷ→ㄴ→ㄹ
- ④ ㄴ→ㄱ→ㄷ→ㄹ
- ⑤ ㄴ→ㄱ→ㄹ→ㄷ

문 22. 세계무역기구(WTO)의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반이사회는 연간 예산안을 회원국의 반 이상을 포함하는 3분의 2 다수결에 의하여 채택한다.
- ②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컨센서스에 의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문제가 된 사안은 표결에 의하여 결정한다.
- ③ 유럽공동체(EC)는 투표권을 행사할 때 WTO 회원국인 EC의 회원국 수와 동일한 수의 투표권을 갖는다.
- ④ 각료회의가 예외적인 상황에서 의무의 면제(waiver)를 결정하는 경우,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국 3분의 2 다수결에 의한다.
- ⑤ 각료회의는 회원국 3분의 2 다수결에 의하여 새로 가입하려는 국가의 가입조건에 관한 합의를 승인한다.

문 23.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에서 협의, 패널절차 또는 상소절차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3자는 분쟁해결기구(DSB)에 협의 참가 의사를 통고하면 동 분쟁의 협의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 ② 패널절차에서 제3자는 의견을 진술하고 서면입장을 제출할 기회를 갖는다.
- ③ 제3자의 서면입장은 분쟁 당사자에게 전달되며, 패널보고서에 반영된다.
- ④ 제3자는 패널절차의 대상인 조치가 대상협정에 따라 자국에 귀속된 이익을 무효화 또는 침해한다고 간주하는 경우, 분쟁해결양해(DSU)에 따른 정상적인 분쟁해결절차에 호소할 수 있다.
- ⑤ 제3자의 상소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상소절차에서 제3자는 의견을 진술하고 서면입장을 제출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문 24.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절차에서 패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 묶인 것은?

- ㄱ. 2개 이상의 회원국이 동일한 사안과 관련된 패널의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이러한 복수의 제소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모든 관련 회원국의 권리를 고려하여 단일 패널을 설치할 수 있다.
 ㄴ. 분쟁당사자의 국민은 분쟁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 분쟁을 담당하는 패널의 위원이 되지 못한다.
 ㄷ. 판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패널위원 전원일치의 의견을 나타내지 않을 때, 패널위원은 개별의견을 실명으로 제시할 권리를 가진다.
 ㄹ. 패널설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패널위원 구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분쟁해결기구(DSB)의 의장이 패널위원을 임명한다.
 ㄹ. 패널은 분쟁당사자가 패널설치로부터 10일 이내에 5인의 패널위원으로 패널을 구성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3인의 패널위원으로 구성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 ⑤ ㄹ, ㄹ

문 25.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에서 비위반제소(non-violation complaint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위반제소를 다룬 사례로 '일본-필름 사건'(Japan-Measures Affecting Consumer Photographic Film and Paper)이 있다.
- ② 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해되었다는 판정이 내려지는 경우 피소국은 문제된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 ③ 비위반제소는 위반제소와 병행하여 제기될 수 있다.
- ④ 피소국의 조치로 인해 대상협정상의 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해되어야 한다.
- ⑤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와 피소국의 조치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노동법

문 1. 노동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근로3권의 주체는 근로자와 사용자이다.
- ② 근로자의 개념은 개별 법률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④ 사업의 경영담당자는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이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사용자가 아니다.
- 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와 사용자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문 2. 노동과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는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③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④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 ⑤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가진다.

문 3. 노동법의 법원(法源)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단체협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은 유효하다.
- ②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근로계약은 유효하다.
-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한다.
- ④ 노동부장관은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⑤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문 4. 단결권이 보장되어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자를 올바르게 묶은 것은?

- | | |
|-------------------|---------------|
| ㄱ. 노동조합에 고용된 사무직원 | ㄴ. 4급 일반직 공무원 |
| ㄷ. 건설업의 일용근로자 | ㄹ. 사립대학의 시간강사 |
| ㅁ.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

- ① ㄱ, ㄴ, ㄹ
- ② ㄱ, ㄴ, ㅁ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ㅁ
- ⑤ ㄷ, ㄹ, ㅁ

문 5. 「근로기준법」상의 기본원칙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용자는 공(公)의 직무의 집행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함이 없더라도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②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할 수 없다.
- ③ 사용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 ④ 사용자는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 ⑤ 근로관계 당사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문 6. 「근로기준법」의 적용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동거하는 친족만을 근로자로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② 기간제근로자와 파견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③ 「근로기준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 ④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은 적용된다.
- ⑤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 7.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 원칙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
- ②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만 하면,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 ③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을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 ④ 임금채권의 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임금을 임금채권의 양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⑤ 근로자가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1개월분의 임금을 미리 지급하여야 한다.

문 8.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구두로 통지하여도 그 해고는 효력이 있다.
- ②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는 해고의 예고를 하여야 한다.
- ③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내릴 때 해당 근로자의 복직을 사용자가 원하지 않으면 금전으로 보상하고 근로관계를 청산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 ④ 사용자가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의 구제명령을 받고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의 구제를 신청한 근로자는 그 해고에 대해 법원에 해고무효 확인의 소(訴)를 제기할 수 없다.

문 9.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 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대상 근로자로 할 수 없다.
- ②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대상 근로자로 할 수 있다.
- ③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주 40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 ④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는 소정(所定)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 ⑤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제4장과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문 10.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③ 연차휴가제도와 관련해서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 ④ 연차휴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자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 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문 11. 「근로기준법」상 임신부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유산 또는 사산하지 않은 경우)

-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6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 ② 사용자는 산전후휴가의 기간과 그 후 9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
- ④ 사업주는 산전후휴가가 종료된 여성 근로자를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 ⑤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근로자에 대해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문 12.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인 경우.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 ②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던 취업규칙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다른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본다.
- ③ 근로자 상호간에 의견 교환 없이 근로자의 과반수가 개별적으로 동의하는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유효하다.
- ④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기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그 변경된 취업규칙은 변경 후 신규 채용된 근로자에게도 당연히 효력이 없다.
- ⑤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그 변경에 반대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문 13. 「근로기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 ②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의 청구를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 ③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이 있으면 약정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할 때,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⑤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문 14.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으나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단결체(이하 '법외노조'라 한다)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법외노조는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나. 법외노조는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다. 법외노조는 어떠한 경우에도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라. 법외노조는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① 가(○), 나(○), 다(○), 라(○)
- ② 가(○), 나(×), 다(○), 라(○)
- ③ 가(○), 나(○), 다(×), 라(○)
- ④ 가(×), 나(×), 다(×), 라(○)
- ⑤ 가(×), 나(×), 다(○), 라(×)

문 1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를 요하는 것은?

- ① 조합원의 제명
- ② 임원의 선거
- ③ 기금의 처분
- ④ 조합원의 탈퇴승인
- ⑤ 임시총회의 요구

문 1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노동조합에 들 수 있는 자는?

-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
- ②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담당자
- ③ 노동조합 대의원회의 대의원
- ④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
- ⑤ 노동조합의 전임자

문 17.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인격이 없는 노동조합은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 ② 단체협약에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 ③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 ④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단체교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문 1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묶은 것은?

가.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쟁의행위로 행할 수 없다.
 나. 쟁의행위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다른 근로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할 수 있다.
 다.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행할 수 없다.
 라.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① 가, 나
- ② 가, 다
- ③ 나, 다
- ④ 나, 라
- ⑤ 다, 라

문 19. 필수공익사업에서 쟁의행위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 ② 필수공익사업의 업무가 아니면 필수유지업무가 될 수 없다.
- ③ 노동관계 당사자는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 ④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노동쟁의에 대하여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
- ⑤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있다.

문 2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긴급조정(緊急調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긴급조정의 결정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일 때에만 할 수 있고, 일반사업에 관한 것일 때에는 할 수 없다.
- ② 긴급조정의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다.
- ③ 긴급조정의 결정에 따라 조정을 행하는 기관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이다.
- ④ 관계 당사자는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포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한다.
- ⑤ 긴급조정에서 노동위원회는 조정(調停)만 할 수 있고 중재는 할 수 없다.

문 21. 부당노동행위의 유형과 그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사용자의 불이익처분이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 ② 근로자에게 어느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이다.
- ③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 ④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사용자에게 지배·개입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 ⑤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을 요한다.

문 2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노사협의회는 동수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할 수 없고, 어떠한 형태로도 근로자위원에게 편의를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 ③ 노사협의회는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 ④ 노사협의회는 위원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⑤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문 2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견을 얻어 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묶은 것은?

(가)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나) 노동조합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다) 지역 단위에서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결정
 (라) 사업장 단위에서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결정

- ① (가)
- ② (가), (다)
- ③ (나), (다)
- ④ (나), (다), (라)
- ⑤ (가), (나), (다), (라)

문 24.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이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에 관한 법률이 아닌 것은?

- ① 「국민연금법」
- ② 「고용보험법」
- ③ 「의료급여법」
-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⑤ 「국민건강보험법」

문 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 근로복지공단이다.
- ②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③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의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⑤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소멸된다.

경제법

문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유한회사도 지주회사가 될 수 있다.
- ② 지주회사는 주식소유현황·재무상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는 취득 또는 소유의 명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 ④ 일반지주회사는 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여야 한다.
- ⑤ 벤처지주회사는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여야 한다.

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와 부당한 공동행위를 비교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양자 모두 부당한 가격결정행위가 행위유형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으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는 실제 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는 반면에, 부당한 공동행위는 그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만으로도 규제될 수 있다.
- ㄴ. 양자 모두 행위자가 관련시장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 또는 그에 준하는 지위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 ㄷ. 양자 모두 법률상 요건에 관한 추정규정이 있다.
- ㄹ. 부당한 공동행위는 복수의 사업자가 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반면에,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하나의 사업자만이 규제대상이 된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ㄱ,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문 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매수인이 할부금을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않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도록 하는 계약조항은 유효하다.
- ② 매수인의 청약철회권 행사기간을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5일 이내로 정한 계약조항은 무효이다.
- ③ 할부계약에서 정한 목적물의 인도시기까지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은 경우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한 계약조항은 무효이다.
- ④ 매수인이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목적물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계약조항은 무효이다.
- ⑤ 매수인이 기한이 되기 전에 나머지 할부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나머지 기간에 대한 할부수수료를 공제하지 않기로 하는 계약조항은 무효이다.

문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 법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② 이 법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피해자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③ 피해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무관하게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당해 사건의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 ⑤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의 입증에 위하여 필요한 사실의 입증이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문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추천가격이나 권장가격의 제시가 구속성·강제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서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
- ② 최저가격유지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 ③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지정상품은 당해 상품에 대하여 자유로운 경쟁이 행하여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도 무방하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당해 재판매가격유지계약이 소비자의 이익을 제한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계약내용의 수정을 명하여야 한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규정을 위반한 사업자가 시정조치를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문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과징금을 부과한 후에 그 산정기준에 관하여 새로운 자료가 나온 경우 이를 근거로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 ② 과징금의 부과는 행정제재적 성격과 부당이득의 환수로서의 성격을 모두 갖는다.
- ③ 형사처벌과 아울러 과징금의 병과를 예정하고 있더라도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④ 부과된 과징금의 액수가 법정 상한비율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될 때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 외에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도 참작하여야 한다.

문 7.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이 다음과 같다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甲회사 50%, 乙회사 15%, 丙회사 10%, 丁회사 8%, 戊회사 5%
단, 甲은 丁의 계열회사이며, 乙은 戊의 계열회사임 (모두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 원 이상임)

- ① 甲회사
- ② 甲회사, 乙회사, 丙회사
- ③ 甲회사, 乙회사, 丁회사
- ④ 甲회사, 乙회사, 丁회사, 戊회사
- ⑤ 甲회사, 乙회사, 丙회사, 丁회사, 戊회사

문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기업결합의 규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를 불문하고 다른 회사의 임원의 지위를 겸임하는 것은 규제대상이다.
- ② 기업결합은 개별 기업의 법적 독립성을 소멸시키는 기업 간의 인적·자본적·조직적 결합으로 기업의 내부적 성장을 위한 대표적 수단이다.
- ③ 이 법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만을 규제하고 있다.
- ④ 이 법은 기업결합에 관하여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 ⑤ 이 법상 특수관계인 등을 통한 간접적인 기업결합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문 9.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불공정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킨 경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사업자에게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 ②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 ③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형사처벌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계약의 내용에 포함된 불공정약관조항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 ⑤ 계약의 내용에 포함된 불공정약관조항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경우에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문 10.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의 제재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법률은?

-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②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③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④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⑤ 「소비자기본법」

문 19. 다음 각 행위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ㄱ. 카드회사가 제휴은행들에 자기의 가맹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도록 통보함으로써 제휴은행들로 하여금 가맹점 수수료율을 변경하도록 한 행위
 ㄴ. 기존에 원료공급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에 대하여 그 경쟁사업자인 다른 회사의 요청에 따라 원료공급을 중단한 행위
 ㄷ. 경쟁사업자에 대한 산업재산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가처분결정이 내려지자 경쟁사업자의 대리점들에 가처분결정 사실과 함께 허위로 부도위험을 통보한 행위
 ㄹ. 한국토지공사가 비인기지역의 토지를 매입한 자에게 매입우선권을 주는 방식으로 인기지역의 토지를 판매한 행위

- A. 거래장제
 B. 거래상 지위의 남용
 C. 거래거절
 D. 사업활동방해

- ① ㄱ-D, ㄴ-C, ㄷ-A
 ② ㄱ-D, ㄴ-C, ㄹ-A
 ③ ㄱ-B, ㄷ-D, ㄹ-A
 ④ ㄴ-C, ㄷ-A, ㄹ-B
 ⑤ ㄱ-A, ㄴ-C, ㄷ-D

문 20. 「소비자기본법」상 자율적 분쟁조정과 한국소비자원 산하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을 비교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에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분쟁조정기구에서 관장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쟁조정을 할 수 없다는 제한규정이 있다.
 ②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에만 당사자의 수락의사를 의제하는 절차가 있다.
 ③ 양자 모두 법령의 위임에 의해서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조정기구에 의한 조정이다.
 ④ 당사자는 자율적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양자 모두 당사자가 분쟁조정 내용을 수락한 경우 그 분쟁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문 2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정한 거래분야의 약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우선한다.
 ② 「상법」 제3편, 즉 회사법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의 약관에 대하여는 이 법의 일부 규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근로기준법」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⑤ 「수출보험법」에 따른 수출보험의 약관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없다.

문 22. 「소비자기본법」에 규정된 소비자피해구제수단이 아닌 것은?

- ① 한국소비자원 원장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권고
 ② 징벌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
 ③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
 ④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
 ⑤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협의체의 자율적 분쟁조정

문 2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피해구제제도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행위의 방지 및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방문판매자 등이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 시정 조치를 취하기 전에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에 그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에 「소비자기본법」상의 한국소비자원도 포함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의 권고안 또는 조정안에 대하여 당사자가 수락하고 이행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에 분쟁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문 2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ㄴ. 소비자단체의 임원
 ㄷ. 다단계판매업자의 지배주주
 ㄹ. 「형법」상 절도죄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ㅁ.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
 ㅂ.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자

- ① ㄱ, ㄷ ② ㄷ, ㅁ ③ ㄷ, ㅂ
 ④ ㄴ, ㄹ ⑤ ㄴ, ㅂ

문 2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비자가 재화를 이미 사용하여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소비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
 ② 소비자가 복제가 가능한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소비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
 ③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 통신판매업자가 결제업자로부터 해당 재화의 대금을 이미 지급받은 때에는 통신판매업자는 지체 없이 소비자에게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⑤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 재화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